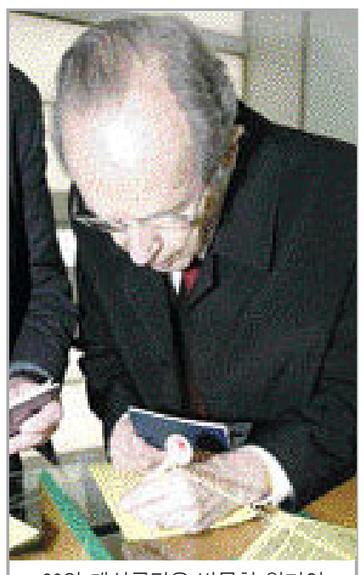

22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윌리엄 페리 미국 전 국방장관이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CIQ에서 검역질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페리 미 前국방장관

"개성공단 프로젝트 한반도의 미래"

윌리엄 페리 미국 전 국방장관은 22일 "개성공단 프로젝트는 한반도의 미래"라고 말했다. 페리 전 장관은 이날 개성공단을 방문, 1단계 부지와 신원 등 입주기업을 둘러본 뒤 이같이 평가한뒤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인상을 받았으며 (개성공단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 지는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동행한 통일부 당국자가 전했다.

그는 또 "당신들이 개척자"라며 북측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그의 방북에는 스티븐 보스워스 전 주한미 대사, 미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애쉬턴 카터 하버드대 교수, 김종훈 벨 연구소 소장 등도 함께했다.

페리 전 장관은 지난 19일 방한해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및 주요 대권 주자들을 만나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이날 개성공단 방문 일정을 끝으로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8년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에 따른 위기 속에 대북정책조정관에 임명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인 '페리 프로세스' 보고서를 만들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선제공격론' 등 경고성 발언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차관 정진호 대검차장 정동기 유력

■ 검사장 인사 어떻게 되나

'빅4'에 안영욱·이귀남·김수민·문성우

정부는 빠르면 23일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차장, 대검중수부장, 대검공안부장 등 검찰 요직을 비롯한 검사장급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인사추천회의를 열고 검사장 승진 및 전보인사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짓고,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23일께 법무부를 통해 인사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차관에는 정진호 광주고검장, 대검차장에는 정동기 법무차관이 각각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빅4'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안영욱 부산지검장, 대검 중수부장에 이귀남 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부장에 김수민 법무부 보호국장이 유력하며 법무부 검찰국장은 문성우 현 국장이 유임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검장에는 홍경식 법무연수원장, 광주고검장에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 대구고검장에 권재진 대구지검장, 법무연수원장에 임채진 서울중앙지검장이 각각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대통령 보고와 재가 절차를 거쳐 23일 인사안 발표가 이뤄질 것 같다"며 "인사협의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당사자 해명으로 말끔히 해소돼 당초 (법무부의) 인사안 내용이 바뀐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검사장 승진인사에서는 특히 발탁 차원에서 소병철 대검 범정기획관과 길태기 서울고검 검사 등 사법연수원 15기가 2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검사장 승진 대상에는 사법연수원 13기 출신 5명, 14기 8명이 포함됐다.

당초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이 정례브리핑에서 "인사추천회의후 22일 오후 법무부에서 검사장 인사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에 공식 발표가 늦춰지는 것이 인사추천회의 논의과정에서 일부 검사장 후보의 검증 결과에 대한 논란에서 비롯된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지, 그런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매니페스토' 실천

'자치단체장 네트워크' 출범

광주·전남 유태명청장 등 5명 참여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과 신정훈 나주시장 등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 5명이 참여하는 '한국매니페스토자치단체장네트워크'가 23일 공식 출범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자치단체장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 네트워크에는 전국 230명의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23명이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광주·전남에서는 공동준비위원장으로 참여해온 유 청장과 신 시장을 비롯 서삼석 무안군수, 김종식 완도군수, 황주홍 강진군수가 함께 한다.

이들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선거 및 정치, 행정의 구조적 혁신 없이 지방자치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주민들과의 약속이자 계약인 선거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다짐한다.

자치단체장네트워크는 특히 17대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에게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공약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한일매니페스토자치단체장 원탁회의 등 외국자치단체 교류협력사업 ▲효율적인 분권화 추진 ▲민선 4기 1주년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등 참공약 이행을 위한 사업 ▲자방자치 정책·제도개선 사업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는 "네트워크 출범을 계기로 단체장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 중앙정치의 쓰나미로 실종된 지방정치를 살려내고 자치 역량 강화에 힘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사회과 교육과정 정상화" 시위 22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사회과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 소속 중고교 사회과 교사들이 '사회과 교육과정 정상화'를 요구하며 교육부총리상 및 장관상을 교육부에 반납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명못하면 자백 간주…즉각 결단"

정영진 부장판사 사흘 연속 대법원장 비판 글

사법불신 문제를 제기하며 두 차례에 걸쳐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실상 퇴진을 거론했던 현직 부장판사가 22일 세번째 글을 올려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영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부통신망에 올린 '이용훈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하며'라는 글에서 "스스로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들이 나서서 진정 사법부와 국민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결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판사는 "국회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최악의 경우 탄핵소추도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지금 문제되는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은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것으로 개인에 대한 의혹 해명에 대법원 공무원들이 동원될 수는 없다"며 "대법원장이 진정 결백하다면 국민 모두가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눈물로 호소해서라도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고 주장에 대해 피고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는 경우 원고 주장을 자백으로 것으로 간주하는 '자백간주 판결'을 들며 "대법원장이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 자백간주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전남교육청 설문 공개해야

최재호

체육부 차장

전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전남 교육의 청렴도' 평가에 나선다.

이들은 다음달 도교육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사업무와 예산집행 등에 대해 교육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교육위원이나 도의원 등은 물론 내부 상급자 등의 '내외부 압력이 있었는지' 설문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노조가 공무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게 된 것은 올해부터 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 조사가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부에서 체감하는 청렴도'를 조사해 점수와 순위를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정부의 청렴도 조사는 사립학교 재정지원, 공사계약 및 관리, 학원지도 점검, 물품·용역 계약 및 관리, 예산 재배정·교부 및 감독,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 분야 등에 대해 실시됐다. 이 분야에 대해 외부에서 느끼는 교육청의 청렴성 정도가 그 대상이었다. 때문에 조사 대상자도 해당학교 행정실장, 계약업체 대표자, 학원장, 운동부원 학부모 등 외부인이었다.

도교육청 노조의 이번 조사는 분명 고무적인 일이며 교육청 당국이 아닌 노조가 청렴도 조사에 나선다니 관심이 더 크다.

하지만, 도교육청 노동조합은 적어도 설문조사와 관련해서는 신뢰도에 후한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도교육청의 청렴도 평가를 위해 행정실장 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현장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경험이 있느냐', '청탁을 통해 좋은 자리에 가거나 승진하겠느냐' 등을 묻는 설문조사 한바 있으나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설문에 응답한 일부 공무원들은 '할 수만 있다면 인사청탁을 하겠다'는 등 솔직한 답을 해 도교육청의 청렴도에 큰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기자는 당시 끈질기게 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끝내 거부당했다.

그렇다면, 이런 정도의 신뢰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노조가 또다시 설문조사를 한다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얼마나 믿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과연 그 결과를 무조건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 공개하고 낮으면 공개하지 않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중요한 것은 이번 설문조사에 시민·사회·교육·학부모단체까지 관련 기관단체들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는 설문문항을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한 뒤 이를 모두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천명하는 것이 어떨까.

/ lion@kwangju.co.kr